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나라재정 보기

11

2023 November

Vol. 83

FIS 인사이트

기후 변화와 재정 대응

재정칼럼

ESG 시대 산업계의 위기와 기회:
EU의 新 배터리 규제를 중심으로

두 얼굴의 ESG 어젠다
지혜롭게 안고 공존할 것인가,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가

국가재정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CONTENTS

2023 NOVEMBER

Vol. 83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재정 INSIGHT

04

FIS 인사이트

기후 변화와 재정 대응

박정수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12

재정칼럼

ESG 시대 산업계의 위기와 기회:

EU의 新 배터리 규제를 중심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두 얼굴의 ESG 어젠다

지혜롭게 안고 공존할 것인가,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국가재정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재정 NOW

3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2

키워드 재정

혁신금융

3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50

재정, 그땐 그랬지

‘경인 아라뱃길’과 ESG

54

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한

도시의 부동산 규제

58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60

재정 캘린더

63

애독자 코너





Insight



기후 변화와 재정 대응

박정수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mymajesty@fis.kr)

들어가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는 국제기구의 개발 의제에 빠지지 않는 대세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정부 재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등은 지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만, 적절한 수준의 탄소세(carbon-tax)는 화석 에너지 유통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를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정부 대응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OECD의 탈탄소 정책제안, NET ZERO+

2023년은 기후와 관련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폭염, 산불, 가뭄, 한파와 폭설 등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¹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 상태를 탄소중립으로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OECD의 논의는 넷제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계획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기후 대응이 각국 정부가 당면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아니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의 후기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동 등 세계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OECD는 각국 기후 대응 정책이 다른 위기와 대응 의제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OECD가 권고하는 NET ZERO+ 정책은 여러 정책 의제와 기후 대응 정책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기후 대응 정책이 각국의 정책 의제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ET ZERO+는 파리 협약에서 제시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리 협약이 제시한 기한은 35년이다. 즉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OECD는 장기 시계에서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개선하고 조세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 병목현상이 있어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자 부족, 공급망 취약성, 기술 부족, 자본재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비용 상승 등은 병목현상의 몇 가지 사례일 뿐이다. 즉 정부 정책은 지금 설정한 정책방향 하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그 자체로도 목표이기도 하지만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NET ZERO+ 정책의 추진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OECD는 기후 대응 정책을 위한 다양한 조합, 이들 정책 조합이 국내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각국별로 얼마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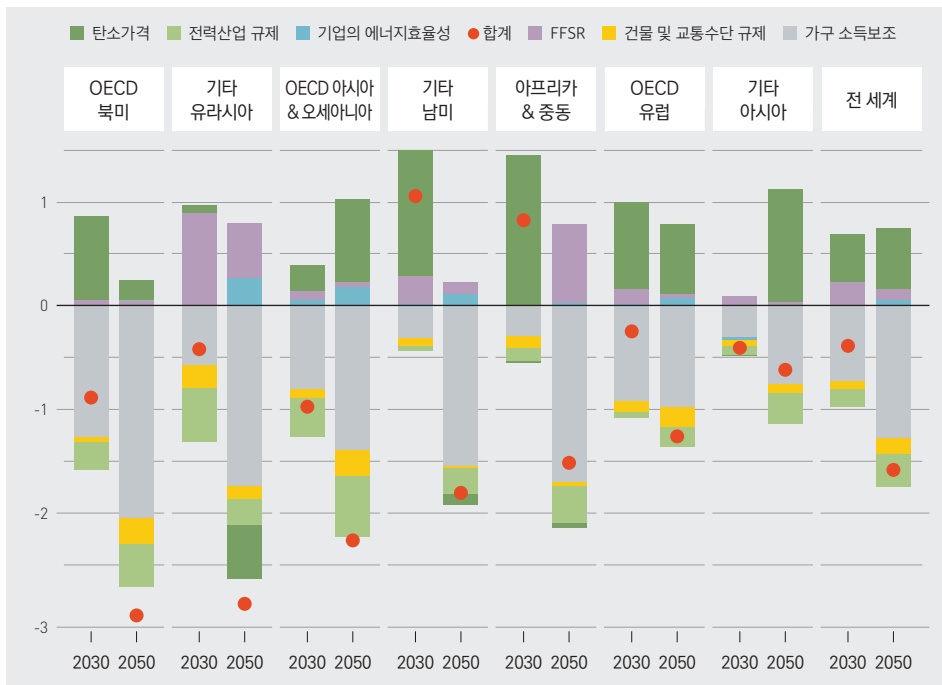
또한 NET ZERO+ 목표는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기술의 적용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비용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정부 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정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투자로 과학기술과 혁신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단순 상용화 중심에서 넷제로 목표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NET ZERO+ 목표를 향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녹색 예산(Green budgeting)과 같은 다양한 정책도구를 통해 공공 재정지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녹색예산 중 대표적인 것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을 활용해 녹색 제품과 서비스로의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녹색 예산, 기후정책과 관련된 핵심 정부부처들은 전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책 집행의 실체이자 추진동력으로서 동등하게 중요하다.

물론 NET ZERO+ 전환에 있어 공공재정의 위험 요인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NET ZERO+ 전환은 경제 활동 전반에 있어 상당한 변환을 수반하며, 상당한 공공재원의 조달이 필수다. 따라서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중

요하다. 이미 코로나19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자와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도 단기적 과제인 상황이다. OECD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 넷제로 전환에 수반되는 재정적자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GDP 대비 0.7~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세 기반을 발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수입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넷제로 전환 과정에서 수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2050년 기준치 대비 순공공수익 변화

(단위: GDP 대비 %)



주: 넷제로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가정하의 수치 단순합산임. 이는 각 정책수단 조합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ECD ENV-linkages model을 통해 산출한 자료임

FFSR: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출처: OECD(2023.5.)

기후 대응과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IMF의 권고

IMF는 지난 10월 발간한 재정동향(Fiscal Monitor)에서 기후 대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리 협약이 제시한 온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 소비, 투자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중 재정 정책은 변화를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의 수단은 크게 3가지다. 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 혁신과 재생에너지 적용을 증진하기 위한 녹색 보조금, 그리고 가구에 대한 녹색 전환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별적 이전 정책이 그것이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 각국 정부는 이들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조세지출, 녹색 보조금 등을 이용해 저탄소 기술의 적용과 민간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으로 각종 투자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탄소 가격제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등 산업계획(Made in China 2025)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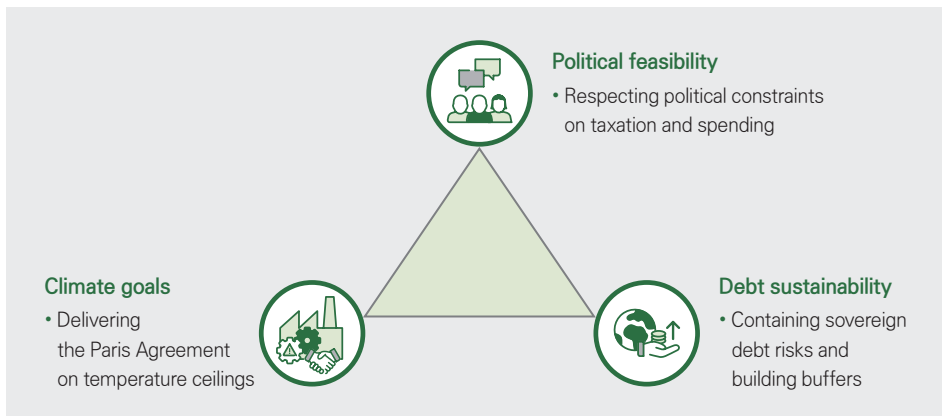
문제는 재정을 통한 기후 대응의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5년 탄소 배출 제로 목적 달성을 위해 2~2.5조달러, 한화 약 3천조원의 투자가 향후 10년간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출의 증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할 수 있고, 이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재정 대응으로 상당한 부채 비율 상승을 겪은 여러 국가들은, 여기에 더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금리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으며, 대응 정책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IMF는 기후 대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 추진으로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전 세계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 대응에 대한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IMF는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탄소가격이 1톤당 2030년 130달러에서 2050년 235달러로 증가하고, 공공 투자와 녹색보조금이 연간 GDP 대비 0.5%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GDP 대비 부채의 비중은 10~15% 정도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0.4% 악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노후 에너지 분야(brown sector) 투자 감소분이 신규 투자 증액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화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아직은 높은 편이다. 개발도상국의 탄소가격은 2030년 45달러에서 2050년 150달러로 증가하여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녹색 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GDP 대비 0.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채는 8~25%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개발도상국은 부채 이자 부담 위험이 선진국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 비중 증가세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편차는 국가마다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재정 대응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향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에너지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에 따라서는 2019년에서 2040년까지 이들 국가의 재정 수입은 GDP 대비 5.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정책결정자에게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기후 대응에 대한 목표 달성에 치중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반

면 목표 달성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면, 비용 부담은 약간 절감되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 문제를 (1) 기후 목표, (2) 재정 지속 가능성 그리고 (3)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트릴레마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조합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뿐이다. 아울러 분배 문제, 가구 생활비 등 정책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영향을 탄소가격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림 2〉 기후 변화의 트릴레마 극복 방안



자료: IMF staff compilations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방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응해 나가고 있다. 법률 근거는 지난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재정투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의하는 등, 기후 대응에 대한 재정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5년 주기의(2023~2027)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금번 발표한 전략계획은 전략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모범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통해 국제질서를 이끄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① 경제·사회 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실천, ② 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③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 중립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의 감축목표는 2030년 기준 2018년 대비 40%인 436.6백만톤이다.

탄소중립·녹색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는 5년간 89.9조원으로 추정되었다. 5년간 부문별 감축 대책(54.6조원), 기후 변화 적응 대책(19.4조원), 녹색산업 성장(6.5조원) 등에 투자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과거 5년 정부 전체 재정 규모 증가율(연평균 8.0%) 수준을 상회한다.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과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제시했다. 그 결과, 2030년경 탄소 가격은 61,400원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수준으로 예상되며, GDP는 연평균 0.01%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전환정책의 재정소요를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할 경우 생산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재정의 역할도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기후 재정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2009년 UN 기후대응기구 UNFCCC² 15차 콘퍼런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기후 대응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000억달러 기금을 조성할 것을 결의한 데서 출발했다. 2015년도 콘퍼런스에서는, 이 목표를 2025년까지 연장했다.

기후재정을 통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이후, 기후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 재정은 다국적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개별 국가의 협약을 통한 대응, 수출 신용(Export Credit), 민간 재정 등 4가지를 통해 수행된다. 이들을 모두 합친 기후재정 규모는 2013년 524억달러에서 2020년 833억달러로 증가했다.

이 기후재정을 다국의 협력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다. GCF는 2010년 UNFCCC 멕시코 칸쿤 콘퍼런스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발족한 것으로, 기후 변화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³. 녹색기후기금은 이미 초기(‘15-’19), 1차(‘20-’23) 재원조달로 총 203억달러(초기 103억달러, 1차 재원보충 100억달러)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0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에서는 2차 재원보충으로 ‘24-’27년 기간 동안 93억달러를 조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누적 조달액은 296억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총 기후재정 목표액의 약 30%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차 재원보충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차 재원보충에는 3억달러 공여를 선언해, 녹색 기후기금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의 유치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이 향후 세계 최대의 기후기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상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기구의 분석과 권고,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등을 살펴보았

다. 기후위기는 각국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는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불리한 산업구조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은 이러한 과거의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그간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획 발표로 인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기구에의 지원도 약속한 만큼, 자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이루어져 계획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기후 걱정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23.10.6.),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 관세부처 합동(2023.4.),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차 국가 기본계획.
- 이상엽(2023), 탄소중립 정책연구II. 한국환경연구원 수탁보고서.
- OECD(2022), Aggregate Trends of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z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020.
- OECD(2023.5.), Net Zero+: Climate and Economic Resilience in a Changing World.
- IMF(2023.10.), Fiscal Monitor-Climate Crossroads: Fiscal Policies in a Warming World.

²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³ 이 기금을 운용하는 본사를 2012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유치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ESG 시대 산업계의 위기와 기회: EU의 新 배터리 규제를 중심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90년대 필자가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연구소에 근무할 때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교통전문가는 찾기 어려웠다. 자동차 산업 공급망 사슬의 핵심 카르텔인 자동차 업계와 정유사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원들은 내비게이션의 상용화를 위해 적정 가격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¹.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 속의 무료 앱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날개를 달았다. 한때나마 교통 관련 연구소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일론 머스크를 평가한다면 그의 최대 치적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라 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로서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부상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Lithium-ion battery, LIB)로 대표할 수 있는 이차전지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EU의 그린 딜(Green Deal)과 핏 포 55 이니셔티브(Fit for 55 Initiative)에 따라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². 나아가 EU 의회는 배터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3년 6월 14일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을 승인하였고, 2023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탄소발자국 등 배터리 이력(digital battery passport)을 표시한 배터리만 EU 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안보와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³.

북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은 단 1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와 주요 자재의 육상 공급을 선호하는 연방 정책으로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새로운 리튬 광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 머트리얼즈(Redwood Materials)의 창립자인 JB 스트라우벨(Jefferey Brian Straubel)이 지난 5월 다시 테슬라의 이사회에 합류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례로 볼 수 있다⁴.

EU의 新 배터리 규제(New Battery Regulation)

배터리 규제는 EU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동차 부문 내 전기화 추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 유형의 설계, 제조 및 재활용 측면을 포괄하여 전체 수명 주기를 감독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럽 연합의 순환 경제 고도화, 그린 딜, 신산업 전략 및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¹ 당시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교통 혼잡을 예측하고 우회로를 알려주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상용화가 어려워지자, 렌터카 고객을 대상으로 길 찾기 수단으로서 마케팅을 전환하였다.

² EU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합성연료(E-fuel) 차량을 제외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van)의 탄소 배출량을 각각 55%와 5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News, 2023.6.30).

³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2023.8.17.), "Circular economy: New law on more sustainable, circular and safe batteries enters into force". EU Environment newsletter.

⁴ Tina Casey(2023.9.4.), "\$4 Billion For EV Battery Recycling &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ever Happened To JB Straubel?". Clean Technica.

EU의 新 배터리 규제는 배터리 종류(EV용, 산업용 배터리 등)에 따라 시기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5,6}. 우선 2024년 7월 1일부터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배터리 제조업체, 모델, 생산시설 위치, 탄소 배출량, 배터리의 수명 단계 전반에 걸친 탄소 이력(carbon footprint), 제3자 검증 보고서 및 탄소 발자국을 보여주는 링크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2년 뒤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위임법에 따른 탄소발자국 등급 라벨을 기재해야 한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이 EU 집행위원회가 규정한 기준 한도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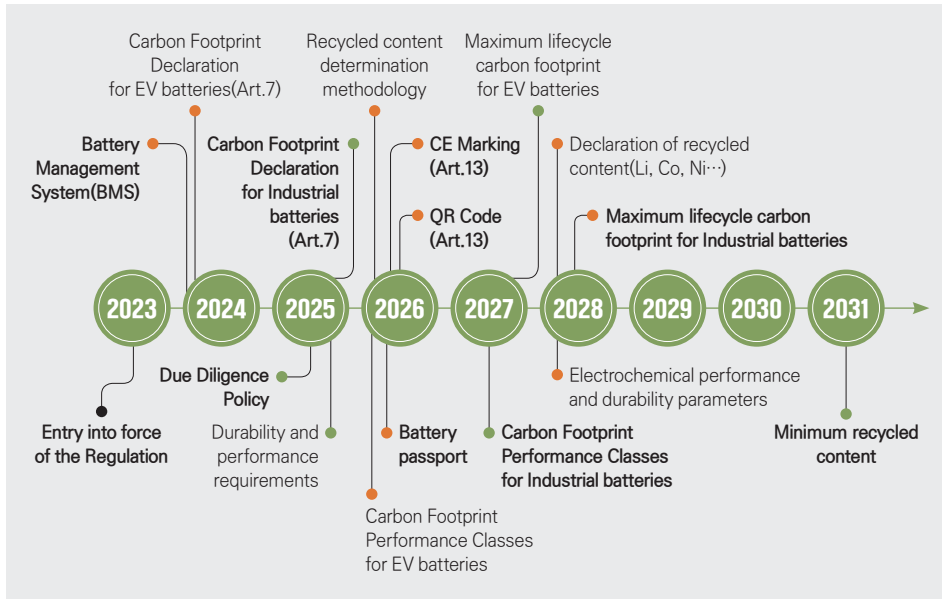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2kWh를 초과하는 용량의 배터리는 EU 시장에 진출할 때 ‘디지털 배터리 여권’과 QR 코드 및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ID 카드 역할을 하며 배터리 세부 정보, 사용 원자재, ESG 등급(assessment), 공급망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된다. 소비자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QR 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CE 마크는 인증기관(Notified Body, NB)의 검증을 거쳐 EU의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표준을 준수한 제품임을 보증한다.



⁵ 휴대용 배터리에는 명시적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게 5kg 이하의 모든 밀봉형 배터리가 포함되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경차용 배터리, SLI 배터리(자동차의 시동, 조명, 점화 전용)와는 구분된다.

⁶ Energy Trend(2023.9.19.), "An overview analysis of The EU New Battery Regulation".

〈그림 1〉 EU의 新 배터리 규제 중장기 계획



자료: <https://www.flashbattery.tech/en/new-european-battery-regulation/>

나아가 EU의 모든 시장 참여자는 포괄적인 실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실사 의무는 전체 배터리 가치 사슬에 걸쳐 적용되며, 원자재, 화학물질, 2차 자재의 조달, 가공, 거래는 물론 배터리 생산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⁷. 또한 새 규정은 폐배터리 및 주요 금속 물질의 재활용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폐휴대용 배터리는 2023년에 최소한 45%, 2027년에 63%, 2030년에 73% 이상의 수거율을 달성해야 한다. 리튬의 경우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 80%의 회수율을 달성해야 하며, 코발트, 납, 니켈의 회수율도 각각 2027년까지 90%, 2031년까지 95%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새 배터리 제조 시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의 재활용률도 각각 2031년까지 16%, 85%, 6%, 6%, 2036년까지는 26%, 85%, 12%, 15%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급진적인 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⁷ 배터리 실사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배터리 운영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측 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포함된다. 사회적 영향에는 인권, 건강 및 안전(산업 보건, 안전 및 노동권), 환경 고려 사항(물 사용, 토질, 대기오염,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자원 추출 과정에서의 환경 이슈

EU가 폐배터리 원료의 재활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광물의 추출이 주요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재 채굴 활동은 산림 파괴, 토양 퇴적 및 수질 오염으로 이어져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린 Macklin et al.(2023)의 연구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금속 채굴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범람원(floodplains) 지역에 거주하는 약 2,300만 명이 독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한다⁸. 오염의 주요 원인은 수로와 범람원을 따라 원자재를 운반하고 선적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누출되거나, 광미 적치장에 장기간 보관된 독성 물질의 토양 유출로 인한 것이다. 저자들은 광산 폐기물의 수로 유입으로 인한 독성이 광미땀 붓기로 인해 직접 유입되는 독성보다 약 50배 이상 강하며, 48만km의 강 수로와 16만4천km²의 범람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배터리(LIB)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발트는 영세 채굴로 인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아동 노동 착취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⁹.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발트 채굴은 환경오염 측면에서 최악의 산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배터리 업체가 리튬인산철(Lithium Iron Phosphate, LFP) 배터리로 회귀한 이유라고 한다¹⁰. 즉, 원자재 공급망 사슬에 얹힌 환경문제가 특정 배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결국 어떤 종류의 배터리이든 원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전략이 향후 배터리 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배터리 폐기처분과 재활용

EU는 배터리의 생애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에서 폐배터리(End of Life)의 재활용(recycling)과 재사용(reuse)을 강조하고 있다¹². 배터리를 일반 폐기 처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독성 화학 물질을 자연에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 폐배터리의 주요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 CRM)를 추출하여 새 배터리에 재활용하거나, 고정식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용도를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것이다.

배터리 재활용 LCA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코발트, 니켈 및 알루미늄과 같은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재료의 재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후처리 공정 과정인 건식제련(pyrometallurgical) 및 습식제련(hydrometallurgical), 직접 재

활용(direct physical recycling) 방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추출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배터리의 재활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환경 영향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고정식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는 방식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 모두에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인정받고 있다¹³. LCA 관점에서 볼 때 배터리의 2차 수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EV 배터리의 개선된 잔존 가치가 새로운 EV로 이전되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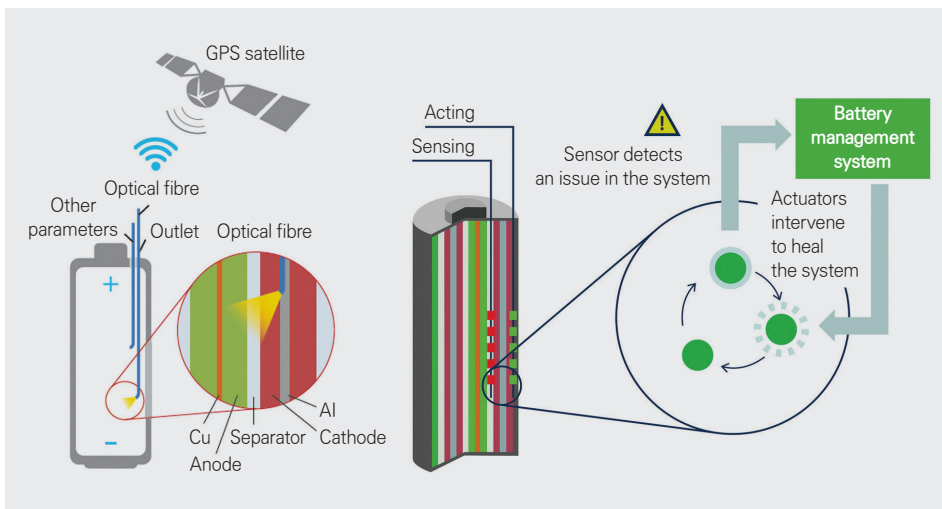


- 8 Macklin, M. G., Thomas, C. J., Mudbhatkal, A., Brewer, P. A., Hudson-Edwards, K. A., Lewin, J.,... & Mangalaa, K. R.(2023), "Impacts of metal mining on river systems: a global assessment." *Science* 381.6664: 1345-1350.
- 9 Hill, N., Rauegi, M. et al.(2023), Research for TRAN Committee – Environmental challenges through the life cycle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Brussels. p.20.
- 10 Oraan Marc(2023.9.30.), "New Threats to the Battery Boom: These Studies Focus on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Autoevolution.
- 11 유사한 맥락에서 전고체 배터리(All Solid State Battery, ASSB)와 소듐이온 배터리(Sodium-Ion Batteries, NIB 혹은 SIB)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ASSB는 전기 운송 부문의 안전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Kotobuki, Munakata, & Kanamura, 2013), NIB는 LIB보다 중량 측정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사이클 수명이 우수하고(Sarkar, Rashid, & Hasanuzzaman, 2022) 리튬, 니켈 및 코발트가 필요하지 않아 다른 화학물질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Tarascon, 2020). Ricardo(2023). p.38 재인용
- 12 Hill, N., Rauegi, M. et al.(2023), Research for TRAN Committee – Environmental challenges through the life cycle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PART II – ANNEX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Brussels. pp.34-35.Hill, N., Rauegi, M. et al.(2023), Research for TRAN Committee – Environmental challenges through the life cycle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PART II – ANNEX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Brussels. pp.34-35.
- 13 Aichberger&Jungmeier(2020); Romare&Dahlöf(2017); Dai, Kelly, Gaines&Wang(2019); Aichberger&Jungmeier(2020); Kamran, Rauegi&Hutchinson(2021); Ricardo(2023). pp.40-41 재인용.

도전과 응전: 자가 치유(self-healing) 배터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EU 집행위원회의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능을 뛰어넘는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된다. 에너지와 전력 밀도(power density)가 이론적 한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며, 뛰어난 수명과 신뢰성은 물론 향상된 안전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¹⁴.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차전지라도 배터리 내의 퇴행성 과정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으며, 극한 기온, 기계적 스트레스, 과도한 전력 사용 또는 단순한 노화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BATTERY 2030+ EU 연구팀의 아이디어는 배터리의 신세계를 보여준다.

〈그림 2〉 BATTERY 2030+ 자가 치유 배터리 개요



자료: Amici et al.(2022)

이들이 제시한 기후중립(climate neutral) 사회를 위한 화학 중립적(chemistry neutral) 접근 방식에는 크게 세 개 영역의 6가지 연구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¹⁵. 그중 배터리 소재, 인터페이스 및 셀의 최적 조합을 발견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반의 자율주행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야심차지만, GPS 위성 교신을 통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스마트 센싱 및 자가 치유 기능’을 배터리 셀에 통합한다는 아이디어는 가히 창조적이다. 즉, 센서를 통해 실제 작동 중인 배터리 셀 내에서 열, 압력, 변형률, 열 흐름 등 전기 화학적 반응을 측정하여 배터리 고장, 열 폭주, 조기 배터리 노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기에 진단하고, 자가 치유 고분자 바인더 등의 기술개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환경 이슈가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직관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성능을 개선하고 최적화 과정을 찾아가는 전통적 기술개발 패러다임은 기후 위기 시대에 그 유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제품과 소재의 설계 및 구조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LCA 전 과정에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내재화한 기업만이 기후위기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¹⁴ E. Commission, European Green Deal(2021).

¹⁵ 세 가지 영역의 6가지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1. Accelerated Discovery of Battery Interfaces and Materials: battery Materials Acceleration Platform(MAP) and Batteries Interface Genome(BIG), 2. Integration of Smart Functionalities: Sensing and Self Healing, 3. Cross-Cutting Areas: Manufacturability and Recyclability.(Amici et al.(2022), A Roadmap for Transforming Research to Invent the Batteries of the Future Designed within the European Large Scale Research Initiative BATTERY 2030+. Advanced Energy Materials. Vol.12(17)).



두 얼굴의 ESG 어젠다 지혜롭게 안고 공존할 것인가,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SG는 논설위원실 13년째인 필자에게 좀 특별한 어젠다다. 무엇보다 ESG 이슈를 가장 앞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게 필자가 속한 한국경제신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무크 '환경ESG'까지 꾸준히 내면서 28호(2023년 10월호 현재)를 발행해왔다. 관련 기사를 담은 지면은 어떤 매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ESG를 미래형 기업 발전의 메가트렌드라고 보면서 달려온 것이다. 사실을 담당하는 논설실에서 더 근무하자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ESG 어젠다가 기업에 어떤 과제로 다가서는지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에는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적지 않은 기업이 ESG를 적극 받아들이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어떤 형태의 제품을 만들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확신과 신념을 갖고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통상 많은 기업이 초창기의 초발심을 잘 지키거나 고유의 가치를 고수하는 데 힘들어한다. 소비자 대중은 그만큼 강력한 존재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취향에 기업이 따라간다면 가격 매출 이익 등 시장요인을 우선시해가는 것은 조금도 비판 내지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 확신을 갖고, 고유의 처음 경영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일관된 지향 궤도를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일이다.

아웃도어 의류와 용품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과 기업 성장사도 그런 관점에서 흥미롭게 잘 봤다. 그렇게 ESG를 능동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영에 적극 적용하는 기업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어쩔 수 없이’ 부응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기업으로서는 성가시고 때로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로 여겨질 것이다.

다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ESG로 넘어오면서 격이나 담론의 수준을 확대해온 셈이니 드러내놓고 불평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나 다양한 경영 관련 학회 등 학계 기류를 봐도 ESG 근본에 문제 제기라도 하다가는 자칫 반사회적 기업으로 매도당할 위험성이 내재한다.

기업의 고민과 입장, 처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는 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라는 업무에서 보면 기업의 속마음을 나름대로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규제 문제, 정부와 국회 등 대관(對官) 문제가 주로 그런 편인데, 솔직히 ESG도 그렇다. 보도와 지면 제작의 대상으로 ESG 이슈를 볼 때와 기업들이 E, S, G 문제를 대할 때 고민을 살펴볼 때 필자 스스로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야겠다.

어쨌든 트렌드로서의 ESG를 좀 ‘쿨하게’ 보려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입장과 부담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편이다. 아무리 좋은 과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갈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면 누구나 힘겨운 건 사실이다. 크기나 외형, 성과와 관계없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조금도 털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요즘 세계무대에서 앞서 달리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로는 건곤일척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판에 한경이라도 기업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힘들어도 투자하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굳어지는 ESG를 받아들이라고 몰아칠 수 있지만 그런 요구는 국회나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의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많다.

기업들의 ESG 고민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보고 겪은 두 가지 장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발 더 나아간 유럽 쪽 ESG 소식이다. 2024년부터 유럽에서의 ESG 기업 공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 5만 기업 이상이 된다. 유럽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도 불뚝이 될 수 있다.

유럽 의회가 몇 달 뒤부터 도입키로 하고 통과시킨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주된 내용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역내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공시하라는 것이다. 공시 기준은 유럽 의회가 2023년 7월 승인한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D)에 따르는데, 해당되는 기업은 물 사용, 공해 오염, 지역 사회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적지 않은 기업 부담이 될 것이다.

CSRD는 유럽 내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21년 입안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기존 ESG 공시 기준인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보다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는 만큼 ESG 확대가 분명하다. 컨설팅그룹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PwC) 추정에 따르면,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네 배인 약 5만 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CSRD의 영향력이 크다. NFRD는 EU 증시 상장사에만 적용되지만 CSRD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그렇게 됐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202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2025회계연도부터는 △총자산 2,000만유로 △총매출 4,000만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026회계연도에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도 CSRD를 따라야 하니 기업들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한국 기업들이 CSRD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다. PwC는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고 친절히 안내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파 및 자유주의 유럽의회 의원 44명은 결의안 통과 직전까지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반대의 목소리는 “CSRD가 복잡하고 양이 많아 기업에 과부담이다. 환경 법규가 EU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관료행정을 줄이려는 EU 노력에 역행한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메가트렌드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게 ESG 어젠다다. 그러니 누가 막을 수 있겠나.

비슷한 이슈로 RE100 캠페인과 이에 맞서는 CF100 대체론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재생에너지에 완고하게 매달리는 RE100에 현실성을 더하는 보완 대체 패러다임의 CF100의 차이는 쉽게 말해 원자력과 수소전력의 포함 여부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쪽이든 상당수 부정적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후 이슈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ESG 관점도 그렇다. 이미 시동이 걸린 ESG 패러다임은 당분간 더 가게 돼 있다.

다음은 공공 부문에서도 ESG 이슈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행정 부분은 그 자체로 S(사회), G(책임·지배구조)인데도, 다시 ESG를 강조하는 경우가 주목된다. 최

근에 필자가 유의해서 본 곳은 경기도 광명시 사례다. 공공부문의 ESG라는 최근의 한 포럼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나란히 앉게 됐다. 그는 광명시의 ESG 행정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했는데, 지방자치행정에서 그 정도로 체계화했다는 것에서 일선에 적용해 나가려는 열의가 돋보였다.

자치행정도 다른 지역과 비교되고 평가받는 시대다. 행정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 등을 놓고 경쟁도 해야 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명시는 색다른 행정 서비스로 주민들 관심 사기에 앞장선 셈이다. 앞으로 ESG 행정에 대한 비교 평가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SG 행정이 과욕을 부리며 기업에 부담을 주고 갑질을 해대는 것만 아니라면 주민들 만족도 높이기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나름대로 진화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 발전하면 ESG 행정이 지방재정에도 도움 되고 지역 경제 기반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진화하는 행정을 기다린다.

필자는 최근 수년째 한국에서 가장 큰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제주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왔다. 여기서도 ESG 이슈가 비중 있게 세션 이슈로 다뤄진 적 있다. 한국 미국 중국에서의 관심 정도와 방향성을 놓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만큼 ESG 어젠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연구와 논의점도 축적돼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반영, 재정집행과의 연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면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더하는 쪽으로 ESG 연구와 응용이 심화되길 기대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재정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가재정의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재정 관련 의사결정 주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 기업 거버넌스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다수의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재정 거버넌스는 정치인과 행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가 적절히 권한을 나누어야 재정의 낭비가 최소화된다. 이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보겠다.

1. 행정부와 입법부

국정의 3단계인 정책의 계획·집행·평가 과정 중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 예산편성이다. 매년 국회는 기재부가 제출한 안의 1% 남짓을 삭감하고 증액해왔다. 정당별로 주요 삭감 내지 증액 사업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관심 밖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 사업을 삭감·증액하려 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복지과 국방 중 어느 부문이 더 늘거나 줄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등 숲을 보는 시야가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만 보아도 건전재정 확립이 중요하다는 여당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효율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 늦다.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단위 사업을 검토하니 원칙 없는 의사결정이 다반사이다. 예산안 통과시점이 매년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예산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산은 어차피 정치적 절차이다.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 적어도 총액과 부문별 증가율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국회가 매년 상반기에 부문별 한도를 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에 예산 한도가 주어지게 된다. 이는 한 사업을 증액하면 다른 사업이 감액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자연히 각 정당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하게 되고 정당 간 협상에 의한 주고받기도 활발해진다. 지금은 의원 각자가 꾀감 빼어 먹듯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은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년의 반은 예산에 집중하고 반은 결산에 집중해야 한다.

2. 중앙-지방 세입분권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원의 분권이다. 지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22년 현재 45% 수준이다. 재정분권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면 서울 등 수도권만 덕을 보아 균형발전이 훼손된

다. 반면 중앙이 걷어 지방의 낙후도를 배려하며 나누어주면 재정분권이 훼손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는가?

차등공동세를 도입하면 된다¹. 공동세는 중앙과 지방이 세수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공동세로 하고 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세이다. 공동세의 핵심 관건은 중앙과 지방의 배분율이다. 이를 전국에 일정하게 적용하면 수도권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낙후도에 따라 낙후권역을 우대해야 한다. 예컨대 3분류하여 발전권역에는 해당 지역에서 걷은 법인세의 10%를 지방에 배분하되 중간권역에는 30%, 낙후권역에는 60%를 배분하는 것으로 하자. 이때 공동세를 적용하는 단위는 기초단체와 특별·광역시로 하고 광역도는 중앙과 지방(기초단체와 특별·광역시)으로부터 일정 비율을 받는 것으로 하면 된다.

낙후도는 인구, 기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는 기존의 지표들을 참고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낙후도를 권역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은 발전권역, 충청·강원은 중간권역, 영호남은 낙후권역으로 분류하고 그 권역 내 모든 지방정부에는 같은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는 분류 방식이다. 그러면 대구, 부산, 광주도 그 자체로는 낙후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영호남 지역에 있으므로 낙후권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 기초단체 중 속한 권역에 비해 더 낙후된 곳에는 해당 권역이 아닌 기초단체의 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경기북부의 연천군은 발전권역인 수도권에 있으나 연천군의 낙후도를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의 낙후도와 속한 권역의 낙후도 중 각 지방정부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등공동세를 도입하면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차등공동세를 도입하면 지방교부세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권한을 잃어버리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3. 중앙-지방 세출분권²

정부사업 중에는 중앙이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산책로, 먹거리타운, 동네 가로등, 마을회관까지 선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별로 지역사업 평가단까지 만들어 소소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모사업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 정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주고 광역이 직접 수혜 시군구를 결정하게 하자. 광역이 중앙보다는 시군구를 더 잘 알지 않겠는가. 중앙 부처가 시군구를 평가·선정하다 보니 부처는 사후평가 시 후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이 문제라면 부처가 선정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앙정부가 시군구를 선정하고 나면 성과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구단주가 감독까지 하면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감독이 아니라 구단주가 되어야 한다. 광역단체를 감독으로 임명하고 감독을 평가해야 한다. 즉 중앙 부처는 광역시도에게 예산과 선정권을 주고 이들의 사업운영을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광역시도의 역량부족은 늘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잘하는 광역시도에는 예산을 더 주거나 자율을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광역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자율을 축소하면 된다. 자율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역량이 올라간다.

둘째, 지금의 정부보조금 사업은 사업 간 전용이 안 되고 남으면 불용액이 되니 억지로 소진하는 사례가 많다. 광역이 중앙에서 받은 예산 중 한 부처의 사업 간에는 전용을 허용하자. 예컨대 10%를 전용할 수 있다면 어떤 부처가 A광역에 기초단체 예산사업 3가지를 각 20억원, 10억원, 10억원 주었다면, A광역은 총액은 유지한 채 18억원, 11억원, 11억원으로 사후 전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에는 20% 등 전용률을 더 높여주면 된다. 나아가 기초단체도 광역에게서 받는 동일 부처의 사업 간 일정 비율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광역시도가 시군구별 전용 허용률을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전국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지방은 원치 않는 예산사업이 있다면 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정받은 대로 쓰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광역에게 권한을 주는 재정 거버넌스에 대해 권한을 잃게 되는 주무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¹ 박진 외(2018),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경제포럼 제11권 제1호 pp.85~11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² 박진(2023.10.16.), 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이데일리 목격칼럼,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 성과 관리 강화³

국민에 의한 재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성과 관리이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의 설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성과지표가 너무 많다. 최악은 예산 소진 등 투입(input) 중심 성과지표이다. 이런 지표는 성과와 무관하게 돈만 쓰면 된다는 목표를 부여한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의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사실상 보조금 수혜자 수가 성과지표이다. 그러면 해수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눈감아 주게 된다. 열심히 색출할수록 수혜자가 줄어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어촌에 정주하는 청년 수를 지표로 하길 권한다. 이참에 2018년 이후 정부의 돈을 받은 청년들이 아직도 어촌에 사는지 해양수산부는 확인해 보길 권한다.

과정(process) 중심 성과지표는 전시행정을 부추긴다. 이는 기관평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홍보물 제작, 회의참석 회수 등 주로 과정을 평가한다. 평가 초기엔 나름 의미가 있다. 할 일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18년이나 되었으면 이젠 성과중심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홍보물 제작을 지표로 하기보다는 그 결과인 재난 행동요령 숙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구별로 비교하는 것이 낫다.



³ 박진(2023.10.17.), 예산투입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파이낸셜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낮지만 산출(output) 성과지표는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녹색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그린카드 발급자 수를 성과지표로 한다. 그 결과 휴양림 이용 등 환경을 훼손하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카드 발급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각 부처가 예산사업의 투입보다 결과(outcome)를 중시하게 만들려면 기재부가 부처의 사업별 성과지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일단 이번 국회 심의에서 예산 소진을 성과지표로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되었으면 한다.

5. 결론

공무원은 임기가 짧아 재임 중 집행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즈음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경우가 많다. 자연히 예산 획득에만 신경 쓰고 성과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은 낭비되고, 전시(展示) 이벤트에 몰두하니 행정력도 낭비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 지방과 나누고 국민의 감시가 작동하도록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은 모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행정부에 맡겨서는 절대로 성사될 수 없다. 국회도 행정부의 권한 약화를 바라지 않는다.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의 권한 약화는 국회의 권한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실에 기대를 걸어 본다.

참고 문헌

- 박진(2023.10.17), 예산투입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파이낸셜뉴스.
- 박진(2023.10.16.), 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이데일리 목격칼럼.
- 박진(2020),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학사.
- 박진 외(2018),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경제포럼 제11권 제1호 pp.85-112.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기준 재정동향

정희민 재정정보분석센터 사원(himin18@fis.kr)

총수입

436.3조원

(누적 기준)

2023년 예산
625.7조원

436.3조원

진도율 **69.7%**

총지출

467.5조원

(누적 기준)

2023년 예산
638.7조원

467.5조원

진도율 **73.2%**

통합재정수지

31.2조원 적자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

70.6조원 적자
(누적 기준)

국가채무

1,099.6조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11.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436.3조원

전년 동기 대비
-46.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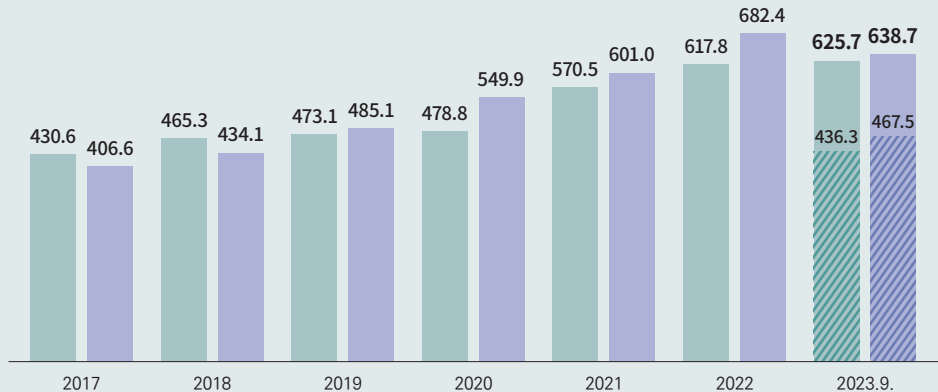
총지출

467.5조원

전년 동기 대비
-68.5조원

■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31.2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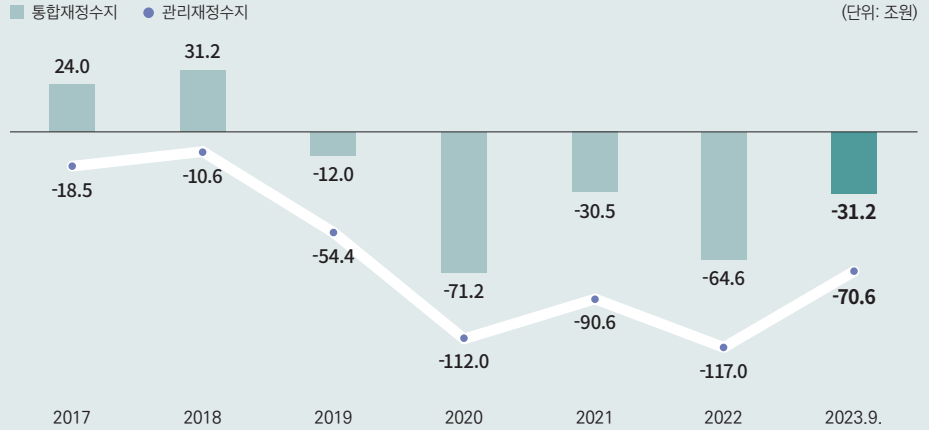
70.6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1.2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4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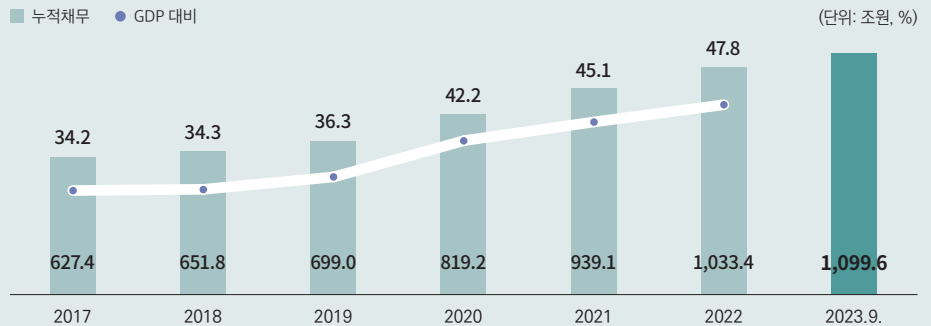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099.6조원

전월 대비
-10.4조원

전년 말 대비
+66.1조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혁신금융

이달의 이슈키워드



혁신금융 방송 카드 학교 투자 학생 빅데이터
아시안게임 문화 바다 병원 대학 우주 안전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쿠팡페이·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금융 지원서비스' 등 총 10건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했다. 지난 한 달간 정부 여론 및 키워드 분석시스템에서도 '혁신금융' 관련 언급량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 '핀테크' 등이 관련 키워드로 급상승했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금융혁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youngseu@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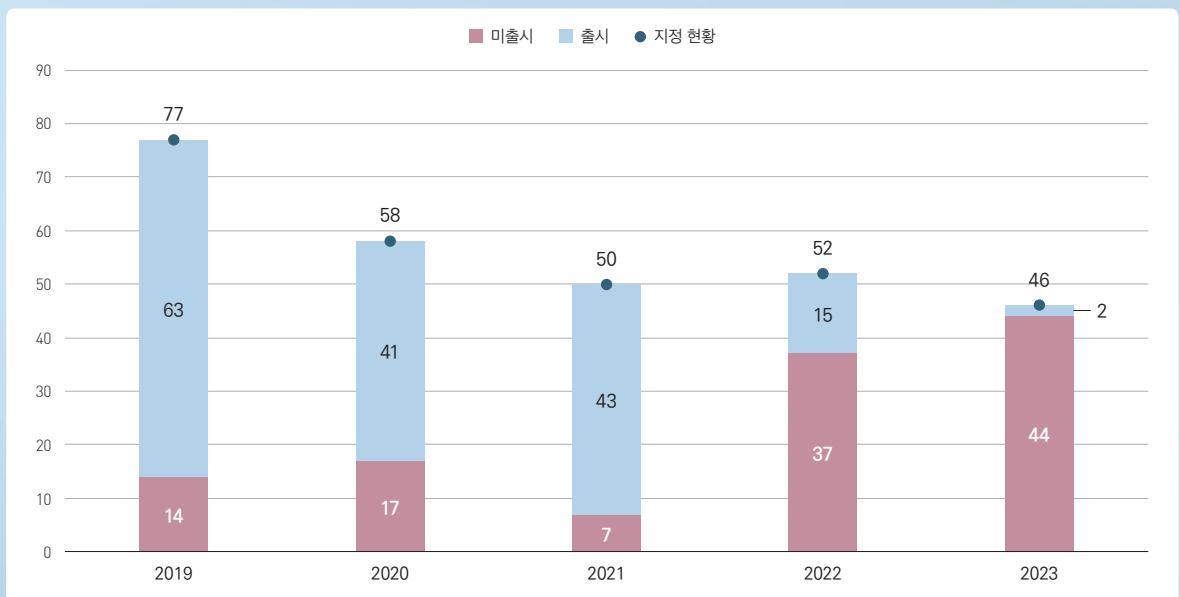
금융	×	서비스	×
핀테크	×	자금	×
기회	×	투자	×
정부	×	정책	×
은행	×	규제	×
대출	×	생태계	×
데이터	×	샌드박스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행정안전부 해안시스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한국연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2023.10.25.)
수집기간: 2023.9.11.~10.10.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발달로 이뤄지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된 환경(기간, 장소, 규모 등)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 분야 역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크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규제 신속확인 등 네 가지 제도로 운영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9년 4월부터 매년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을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3건을 지정해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중 165건이 시장에 출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단위: 개)



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2023),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현황」 등 보조자료 재구성

혁신금융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소관	관련 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사업	145.8	139.5	123.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16.6	17.4	15.9
	금융정책 알리기	8.4	8.8	8.4

자료: 열린재정(2023),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확인해 준다.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뿐 아니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금융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금융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금융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금융혁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핀테크 지원사업, 금융공공데이터, 금융정책 알리기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이를 위해 진행 중이다.

핀테크 지원사업

핀테크 지원사업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및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23.3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 지원, 국제협력강화, 국민 참여 체험 행사 등을 운영한다.

첫째, 핀테크 기업 지원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테스트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위탁 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다. 지원은 최대 1.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총사업비 상한 금액인 1.6억원의 75%이다. 테스트 비용은 기업별 사업화 수준, 지원의 타당성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지원한다. 평가는 비용지원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둘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시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 진출 컨설팅, 통번역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체험 행사는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8월 30일부터 3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총 10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해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의 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일자리 취업 상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지원사업 소개, 금융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해 국민이 핀테크와 금융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은 신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창업 및 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5.9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금융 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2020년 최초 개방을 시작으로, 특수법인 데이터(2021년), 개인사업자정보(2022년)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기업 정보, 공시 정보, 금융회사 정보, 자본시장 정보, 국가자산공매 정보, 금융회사통계 정보, 시세 정보, 금융상품 기본 정보, 개인사업자 정보 등 9개 주제별로 공개한다. 현재 91개 API, 298개 테이블이 포털을 통해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정책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개방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진행한다. 특히, 기업 개요 정보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빠르고 편한 금융공공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정책 알리기

정부는 금융 산업의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정책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위해,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에 2024년 8.4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금융정책 수요자별 특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정책을 소개한다. 공식 SNS(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금융 소식, 금융 용어, 혁신 금융서비스 등 금융 관련 소식을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 산업 및 정책을 국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I. 해외 동향



미국

■ (10.4.) 의회의 임시 예산안(준예산) 합의에 대한 성명서 발표¹

- 재무부 장관(Janet Yellen)은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을 피하기 위한 의회 합의에 환영 입장 발표
- 무모하고 불필요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정치적 벼랑 끝 전술에 따른 경제적 위태로움 대신 정부의 인프라, 반도체,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등 경제적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 이번 예산안 임시합의를 통해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재난 구호 등과 같은 우선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과 전 세계 이익을 위해 중요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수백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 지원 약속
- 푸틴의 전쟁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

■ (10.4.)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은 처리되었으나, 하원 의장 해임으로 예산안 최종 합의까지는 불확실성 지속 전망²

- 전 하원의장(Kevin McCarthy)은 9월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앞둔 상황에서 45일간 임시 예산안 편성·통과
- 해당 임시 예산안은 대폭적인 삭감 및 강경한 이민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안 제외, 재난 지원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형태로 조율
-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는 11월 17일(45일)까지 셧다운에 돌입하지 않았으나, 예산안 최종 합의까지는 불확실성 지속될 전망
- 한편, 전 하원의장은 해당 임시 예산안 통과 이후, 같은 당(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취임 9개월 만에 해임
-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예산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정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자 임시 예산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해임 결의안 제출
-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표결 결과,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되며 의장직 해임

■ (10.10.)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세액공제 지침 변경안 발표(재무부)³

- 재무부 '24년 1월부터 미국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 시, 구매 시점에 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변경안 발표
- 재무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한 보조금 혜택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변경안에 따르면 친환경차량 구매 시 중고차(4,000달러) 및 신차(7,500달러) 보조금 즉시 지급
- 현재는 다음 해 세금 신고 시점(cf.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 후 보조금 수령
- 변경 후에는 소비자가 신청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구매 시점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차량 구매 가격을 효과적으로 인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2년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친환경 차량(신차)에 대해 혜택 제공
-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지급
-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 지급

■ (10.16.)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 중인 IMF·세계은행 합동 연차총회에서 G7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성명 발표⁴

-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표명 및 러시아의 전쟁행위 중단 촉구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이런 전쟁 행위는 비극적인 인명 손실, 재산 및 인프라 파괴, 세계 식량 불안정성 증가, 글로벌 경제 문제 악화 등 초래했음을 지적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과 인프라에 대한 공격 행위 중단, 흑해 곡물 협정(Black Sea Initiative)*의 조속한 복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22년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아래 체결된 협정
- 우크라이나에 대한 IMF 긴급 단기 자금 지원 검토, 주요 인프라 수리,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artnership for RISE(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출범 환영 입장

¹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777>

²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03/kevin-mccarthy-ousted-as-us-house-speaker-by-republican-dissidents>

³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783>

⁴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00>

- 이번 파트너십이 G7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의 재정적 공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참 촉구
- RISE를 통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청정 에너지 제품 공급망 지원, 에너지 안보 보호, 거시경제 안정성 및 회복력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
-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OECD를 통한 지원 확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등 노력
- OECD가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탄소감축 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이하 IFCMA) 지지
- 또한 추후 개최될 G7-아프리카 장관급 원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예정
- G20에서의 주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게 조율된(Predictable, timely, orderly and coordinated)' 공동 프레임워크 이행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 전달
- 신흥국의 채무 문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발전, 빈곤 감축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Growth Trust, PRGT)의 지속 가능한 운영, IMF 쿼터 재검토 등 주요 이슈에 관한 G20에서의 논의 진전에 대해 환영
- 특히 신흥국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잠비아의 채무처리에 관한 양해 각서(MOU)의 조속한 마무리, 가나와 에티오피아의 채무처리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였으며, 최근 스리랑카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채권단 회의에 대해서는 환영과 신속한 해결 기대

■ (10.23.)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무부 장관·관리예산처장 공동 성명 발표(재무부, 관리예산처)⁵

- 2023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6,695억 달러(전년 대비 3,200억 달러 증가)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2022 회계연도 5.4% 적자 대비 1.1%p 적자폭 확대)
- '23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월 발표된 '24년 예산안 추정치(1조 7,300억 달러) 대비 310억 달러 낮았고, 7월 발표된 예산안 중간보고(Mid-Session Review, 이하 MSR) 추정치(1조 6,700억 달러) 대비 260억 달러 높음
- 총수입은 4조 4,393억 달러로 재무부 추정치(4조 5,871억 달러) 대비 1,478억 달러 낮게 나타남
- 총수입 감소는 법인 소득세, 사회보험 및 퇴직금, 소비세, 개인 소득세 등 기타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징수된 데 기인
- 총지출은 6조 1,344억 달러로 재무부 MSR 추정치 대비 43억 달러 높게 나타남

■ (10.30.) 최근 IMF의 세계경제 전망, 기타 국제기구 등의 자료 분석 결과, 성장률,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기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분석(재무부)⁶

-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으며, 경제 생산량 증가, 노동시장 회복력,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23년 간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
- 세계경제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 및 국제적 협력에 따른 성과로 분석

- 특별히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 공급 측면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더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 '23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전망의 개선이 부분적으로 미국 경제의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공급 측면 투자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을 반증



영국

■ (10.4.)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인상, '24년 4월 적용 예정(재무부)⁷

* 만 23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15년 7월 시행)

- 매년 국가생활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제안하는 영국 재무부 장관(Jeremy Hunt)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의 권고안에 따라 국가 생활임금 인상을 약속
- 저임금위원회는 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4년부터 근로자 중위소득의 3분의 2 수준을 목표하는 국가생활임금 권고안 발표 예정(11월)

- 국민생활임금 상승으로 내년 2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 효과는 연간 1,000파운드 이상일 것으로 분석
- 저임금위원회, '24년 4월부터 시간당 11파운드 이상 인상 예상
- 상용 근로자 기준, '10년보다 9,000파운드 이상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

■ (10.12.) 공공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사용 안전성 및 생산 촉진 기술에 대하여 논의(재무부)⁸

- 재무부 수석장관(John Glen), 앞으로의 세금안으로는 공공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공공 부문 생산성 증진 방법 모색이 중요
- 「공공 부문 생산성 검토(Public Sector Productivity Review)」 가을 중 발표 예정
- 수석장관은 AI 사용이 직원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 AI의 안전한 사용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

⁵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29>

⁶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844>

⁷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major-increase-to-national-living-wage>

⁸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ief-secretary-hosts-ai-meeting-to-boost-public-sector-productivity>

- (10.19.) 공정성 단체(Fairness Group)*와의 공동 공개 성명을 통해 정부 부채 관리 기능(The Government Debt Management Function) 개선사항 발표(재무부)⁹

* 정부의 부채 관리 관행 개선 권고를 위해 '16년 설립되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자문가 및 업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부채 관련 자문을 담당

- 정부 부채 관리 기능 센터는 아래와 같이 정부 부채 관리 이행을 지원
 -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식별 및 지원(개인과 기업이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합의된 기준에 따라 부채를 지속적으로 해결, 상환 회피자들을 추적, 적절한 회복을 위해 지원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역량 향상에 기여(정부의 부채 전략 준비, 부채 기능 표준 개발·유지·제공, 부채 관리 관행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권장, 정부기관에 전문적 조언과 지원 제공 등)
- '16년부터 공정성 단체와의 협력 목표였던 취약 계층과의 상호작용 방식 개선 지속 중
 - 채권추심 관행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개선 방법에 대해 조사 예정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관행을 추가로 조사하고, 증거 기반 권장 사항 제시를 위해 공동 작업 프로그램 시행 예정
 - 부문별 모범 사례에 따라 정부 부채 관리의 공정성 원칙을 적용
 - 부채 징수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적인 부채 징수 및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해 공정성을 보장할 것

- (10.19.) '23년 10월 영국 경제 전망치* 발표(재무부)¹⁰

* 1986년부터 영국 경제의 독립적 전망치를 추정해왔으며, 매월 영국 경제에 대한 주요 경제 및 재정 지표의 독립적 전망치를 게시

- 경제성장률은 '23년과 '24년 모두 0.5% 증가해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올해 4.5%에서 2.5%로 증가세 완화 예상
 - 공공부문은 올해 1,217억 파운드를 순차입하고, 내년에는 986억 파운드를 순차입해 순차입 규모 축소 전망

- (10.23.) '23년 9월 공공부문 재정 통계 공시(재무부)¹¹

- 공공부문 순차입금(은행 부문 제외)은 143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16억 파운드 감소
 - 1993년 월별 기록 시작 이래 여섯 번째로 높은 차입금을 기록
-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net cash requirement)*은 152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15억 파운드 증가
 - * Network Rail Limited(철도공사)와 UK Asset Resolution Limited(영국 금융 서비스 지주 회사)는 제외
 - 다만,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이하 OBR)* 예측치인 166억 파운드보다 14억 파운드 축소
 - * 영국의 독립적 재정위원회로 경제·재정 전망 제공, 재정 목표에 대한 정부의 성과 평가, 재정위험(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등 재정 관련 분석 제공 및 감독 역할 수행

- 중앙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는 7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72억 파운드 감소
- 1997년 월별 기록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이자 기록, '23년 6~7월 사이 소매물가지수 하락으로 지수연동국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 감소가 원인
- 회계연도 상반기('23년 4~9월)의 공공부문 순부채(은행 부문 제외)는 817억 파운드(전년 동기 153억 파운드 증가)
- '23년 3월 OBR이 예측한 1,015억 파운드보다 198억 파운드 감소
- 공공부문 순 부채(은행 부문 제외)는 2조 5,990억 파운드로 GDP의 약 97.8%로 추정되며,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공공부문 순자산(은행 부문 제외)은 6,673억 파운드 적자 기록(전년 동월 5,194억 파운드 적자)



EU

■ (10.4.) 유로존 국가들은 '24년 경기 둔화로 재정 긴축이 제한적일 전망(로이터 통신)¹²

- 유로존 국가들은 '24년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철회하여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 긴축이 제한될 것

-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위험
- EU 재정준칙*을 차치하고서라도, '24년 재정긴축은 ECB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22년 중반 이후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한계
- *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은 10월 15일까지 '24년 예산안을 제출하여 유럽연합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준수할 때까지 매년 적자를 0.5% 축소해야 함
- ECB는 각국 정부에 여전히 5%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재무장관들은 이에 동의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닌 상황

⁹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ief-secretary-hosts-ai-meeting-to-boost-public-sector-productivity>

¹⁰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forecasts-for-the-uk-economy-october-2023>

¹¹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sector-finances-bulletin>

¹²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euro-zone-2024-fiscal-tightening-seen-limited-by-slowing-economy-2023-09-27/>

■ (10.4.)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을 위한 EU 자금 조달 정책(유럽연합 이사회)¹³

-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기후 관련 대규모 투자 지원
- 기후 행동에 우호적인 공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속 가능한 투자로 전환
- '21~'27년 장기 EU 예산의 30%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의 37%는 기후 관련 목표에 지출
-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을 지향
- '18년 3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행동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
- '19년 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안
- '20년 4월 유럽의회는 EU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를 채택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이 기업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며, 녹색 분류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육성하도록 함
- '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후 대응 관련 EU의 재정 기여도를 제고
- '21년 EU 회원국의 기후 금융에 대한 지원은 230억 4천만 유로 규모에 달했으며, 지원금의 54%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사용, 나머지는 보조금 형태로 투입
- 기후 재원에 대한 기여는 '15년 파리협정의 주요 사항으로, 이 협정에서는 '25년까지 선진국의 기여금 목표를 연간 1천억 달러로 설정

■ (10.12.) 'Fit for 55' 법안을 채택해 '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5%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집행위원회)¹⁴

- 새로운 법안은 유럽 그린딜의 핵심 사항으로, 경제의 주요 부문을 포괄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를 제시
- 'Fit for 55' 법안은 '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21년 7월 제안되었으며, 유럽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 새로 조성된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을 통해 EU 예산에서 650억 유로, 총 86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해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
- 새로운 탄소 국경 조정 매커니즘을 통해 수입 제품도 해당 부문의 국경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도록 보장
- 개정된 재생 에너지 지침에 따라 '30년 EU의 구속력 있는 재생 에너지 목표는 현재 32%에서 최소 42.5%로 상향 조정
- 해당 지침에는 EU 최초로 에너지 빈곤(에너지 빈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
- 개정된 CO2 규정에 따라 '35년까지 유럽에 등록된 모든 신차와 승합차는 무공해 차량이 될 것
- 배출량 제로를 향한 중간 단계로 '30년까지 신차의 평균 배출량은 55%, 신형 승합차는 50%까지 감축 목표

-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현재 에너지, 순환 경제, 공해 및 자연 관련 법안을 협상 중이며, 집행위원회는 향후 몇 달 내에 모든 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예정

■ (10.16.) 유럽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속적인 역풍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유가 영향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EU 집행위원, Paolo Gentiloni)¹⁵

-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여파가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측정하기에 아직 이르다 판단
- 현재로서는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
- 중국의 수요 부진, 인력 부족, 고금리,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유로 지역을 압박하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1%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 또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특히 유가 상승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재정 정책 유지를 권고

■ (10.19.) EU 재정준칙에 대해 이견을 보인 프랑스-독일 재무장관이 룩셈부르크에서 부채 한도(debt-brake)에 대한 논의 시작¹⁶

- 프랑스 재무장관(Bruno Le Maire)은 EU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몇 주 간 독일 재무장관(Christian Lindner)과 협력하여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유로존 재정 준칙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나,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독일 재무장관은 강제성 없는 합의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

■ (10.23) '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 발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위원회가 추진할 새로운 제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 제시¹⁷

- '19년 정치 지침(political guidelines)에 명시된 공약의 90% 이상이 이행되었고, '24년 유럽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¹³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climate-finance/>

¹⁴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754

¹⁵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12/europe-s-weak-economy-faces-inflation-oil-risks-gentiloni-says?srnd=null>

¹⁶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17/franco-german-deal-to-be-base-for-eu-fiscal-rules-le-maire-says?srnd=economics-v2>

¹⁷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965

- 위원회가 제시한 장기 경쟁력 전략은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고 요건 간소화 등으로 부담을 25%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연합 관세법 개정으로 보고 요건을 간소화해 무역업체가 약 2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중소기업 포함해 4억 5천만 유로의 비용 절감 목표
- '24년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또는 경제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추가적인 간소화 제안을 제시하여, 중복되는 의무를 통합하고, 관련 비즈니스 수를 줄이며, 디지털화를 강화할 것



독일

- (10.16.) EU 재정준칙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독일은 재정적자 수준이 GDP의 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재무장관, Christian Lindner)¹⁸
- 재무장관은 현재 협상 중인 새로운 재정준칙이 EU 경제의 부채 수준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주장
- 이에 더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GDP의 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재정적자 3%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
- 독일은 룩셈부르크에서 일부 유럽 국가와 EU 재정준칙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
- 일부 국가는 각국 정부가 매년 GDP의 0.5%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각국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월에는 기존 규정 다시 적용

- 공공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채관리의 유연성을 요구해 온 프랑스와 최근 감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탈리아는 재정적자를 3% 한도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 (10.23.) '23년 3/4분기 연방정부 예산 추이에 관한 주요 내용 보고(재무부)¹⁹

- (수입) '23년 3분기 연방정부 수입은 총 2,788억 유로로 전년 대비 8.6%(약 221억 유로) 증가
- 세입 규모는 2,586억 유로로 '22년 2분기보다 8.1%(194억 유로) 증가, 기타 수입(other income)은 '22년 2분기보다 15.6%(27억 유로) 증가
- '23년 3분기 총 세수(지방자치세 제외)는 전년 대비 13%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공동세 수입이 15%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임금 세수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데에 기인
- (지출) '23년 3분기 연방정부 지출은 총 3,364억 유로로 전년 대비 3.2%(약 111억 유로) 감소
- 투자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69억 유로) 증가한 반면, 소비 지출은 5.6%(180억 유로) 감소, 전반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지출은 약 198억 유로로 급격히 증가
- (재정수지) '23년 3분기 연방정부 예산은 약 576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 (10.26.) 일반정부 예산안 계획(Draft Budgetary Plan) 발표, 현재 추세와 계획을 바탕으로 연방, 주, 지방 당국 및 사회보장기금의 예산에 대한 재정 전망치 제시(재무부)²⁰

- 전망에 따르면 '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2.5%로 '22년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
- '23년 재정적자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 GDP의 4.25%에서 2.5%로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경제 안정화 기금에서 에너지 가격 보조 지출 감축에 기인
- 독일 재정 정책 전략의 핵심인 '재정 정상화로의 복귀' 목표에 따라 '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1.25%로 축소할 전망
- 독일은 EU 재정준칙(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0.3% 개선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래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2~'27년 기간 동안 정부 총 고정자본은 연평균 6%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
- 또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투자 보조금(Government investment grants)은 팬데믹 이전인 '19년에 비해 '22년 80%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몇 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증가 예상
- 현재 계획에 따라 '24년 연방 예산은 '23년 12월 1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채택될 예정



국제통화기금

- (10.4.) '기후 전환기: 지구 온난화 시대의 재정 정책(Climete Crossroads: Fiscal Policies in a Warming World)'이라는 주제의 '23년 10월 재정 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²¹
-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대비하여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전 세계적으로 '28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매년 1%p씩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추진은 더 큰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함
- 공공투자 장려, 재생 에너지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배출량 감축 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며, 공공부채는 GDP 대비 45~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
- 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 목표 달성 사이에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비용 효율적이며 세수 확보를 통한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대중적으로 선호하지 않음
- *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¹⁸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13/germany-gets-tough-on-eu-debt-rules-warns-markets-will-judge-harshly?srnd=null>

¹⁹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3/2023-10-federal-budget.html#

²⁰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Brochures/german-draft-budgetary-plan-2024.html

²¹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3/10/10/fiscal-monitor-october-2023>

- 단일 정책만으로는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실용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조합이 필요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소가격제는 필수적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피베이트(feebate), 친환경 보조금, 규제 표준 등의 다른 감축 수단으로 보완해야 함
- 재정 비용은 세입 및 세출 기반 정책의 조합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정책 조합과 우선 순위는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정부는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배출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의무화 규제 시행, 세금 공제 또는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권고

■ (10.12.) '23년 10월 세계 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 발표²²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년 3.5%에서 '23년 3.0%, '24년 2.9%(지난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00~'19년 평균인 3.8%보다 낮은 수준
- 유로 지역의 회복세 둔화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2년 2.6%에서 '23년 1.5%, '24년 1.4%로 하락할 것이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 '22년 4.1%에서 '23년 4.0%, '24년 4.0%로 소폭 하락할 전망
- 인플레이션은 '22년 8.7%에서 '23년 6.9%, '24년 5.8%로 꾸준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3년과 '24년 전망치는 각각 0.1%p, 0.6%p 상향 조정되었으며 '25년까지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중국의 부동산 위기 심화와 이로 인한 원자재 수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경기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과 기후 및 지정학적 충격 또한 리스크로 작용
-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통화 정책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부채 감축 노력과 지정학적 분절화에 대응한 국가 간 협력, 녹색전환에 대해 강조
-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동시에, 적절한 정책을 통해 금융 스트레스 완화 필요
- 각국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면서 예산 운용 여력을 재구축하고, 지출 효율화와 노동 시장 참여 장려 등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부채 감축을 촉진해야 함
- 부채 문제 해결과 기후 변화 대응,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 필요

■ (10.19.) '23년 10월 아시아 태평양(Asia and Pacific) 지역 경제전망 발표²³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은 '22년 3.9%에서 '23년 4.6%(지난 전망과 동일), '24년 4.2%(지난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로 둔화되며, 중기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3.9%로 전망
-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의 강세에 기인하여 올해 전 세계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생산을 저하와 외부 수요 약화, 중국의 부동산 부문 침체 등으로 회복세 약화 전망
- 과거 미국과 일본의 빠른 성장이 중국의 성장 둔화를 상쇄했으나, 최근 미국, 일본 경제 구조 변화와 중국의 인구 고령화, 생산성 증가 둔화가 아태 지역 성장에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4년 대 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목표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빠른 디스 인플레이션 속도로 평가
- 지난 전망(4월)에 비해 경기 상·하방 리스크는 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의 정책 제한과 글로벌 금융 긴축에 대응해야 함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은 제한적인 통화정책 유지 권고
-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긴축 정책으로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는 경우,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공부채 수준을 고려한 재정 건전화 노력, 신속한 공조의 필요성 강조
- 장기적으로는 공공부채 억제와 함께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추가 지출 등 성장을 촉진하는 개혁과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투자 환경 개선 등 지리경제학적 분열 완화 노력 필요



- (10.6.) 「23년 경제 정책 개혁: 성장을 위한 노력 (Economic Policy Reforms 2023: Going for Growth)」 발간²⁴

- (서론) 생산성 성장 약화, 사업 역동성 감소,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효과적인 자원 활용의 어려움, 성장 전략 부족으로 인한 환경 지속 가능성의 부재 등 OECD 국가의 장기적 과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래 네 가지 내용 분류를 통해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
- (①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및 관리 강화) 비공식 부분이 큰 신흥경제국은 사회보장 및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확대할 것을 제언
- 지원 시스템을 통한 빈곤 감소, 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며, 사회적 지출 효율성도 개선 가능
- (②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장애물 제거) 기업 기술 발굴, 사업 관행 등 경쟁에 관한 공공정책 개선 필요
- 규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생산성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
-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권장
- 환경세 부과 시 저소득층이 받는 불균형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성장과 복지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
- 성장과 혁신의 핵심 동력인 교육, 기술 향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권장

²²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10/10/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3>

²³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APAC/Issues/2023/09/27/regional-economic-outlook-for-asia-and-pacific-october-2023>

²⁴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economic-policy-reforms-2023_9953de23-en

- (③ 빠른 탈탄소화 목표 달성 전략) 탄소 배출 부과금을 통해 고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할 것을 제안
- 화석연료 투자와 청정에너지 및 네트워크 투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해야 함
- (④ 생산성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확산)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 후 전환 정책을 강화할 수 있기에 디지털 기술의 빠른 확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정책 제안
- 광대역 연결 투자 정책,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 보장, 신생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 등은 디지털 기술 채택을 촉진 시킬 것
- 더불어 인적자본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디지털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할 것을 강조

■ (10.12.) OECD-G20 주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Project, 이하 BEPS)*의 일환으로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문제 - 조세 규정 적용(두 번째 원칙)**」 발간²⁵

* '13년 OECD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G20 국가들과 힘을 합쳐 BEPS 대응 계획을 수립

**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Subject to Tax Rule(Pillar Two)

- 원천지국 과세 규칙(the subject to tax rule, 이하 STTR)*에 대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이하 IF) 회원국의 합의 사항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

* 원천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규칙

- 개발도상국과 행정 역량이 낮은 국가가 조세 제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 회사 간의 이자, 특허권(royalty), 기타 특정 지급금에 STTR을 적용하며, 원천지국이 거주지국의 세율을 인정한 다음 추가 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도상국과 IF 회원국의 다자간 조약은 STTR의 신속하고 일관된 이행을 촉진할 것
- STTR보다 낮은 명목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IF 회원 개발도상국은 양자 조약에 의해 STTR 최저세율을 시행하기로 약속

■ (10.26.) 「OECD 경제 조사: '23년 스페인(OECD Economic Survey: Spain 2023)」 발간²⁶

- 러-우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전망 상황에서도 스페인 경제는 회복 중
- '23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크게 완화 후 6월부터 소폭 반등하였으나, 본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GDP 성장률은 둔화 예상
- 고용 성장은 견고한 수준이며, '21년 노동시장 개혁으로 특히 청년층이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
- 금융 부문은 탄력적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부실채권 증가 우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년 이후 공공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

- 장기적으로는 연금과 보건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
- 불평등과 빈곤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22년 기준 스페인 인구의 1/4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아동 빈곤은 여전히 높은 상황
- 고령화 관련 지출 및 성장 지향적 지출 등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필요
- 인구 고령화, 생산율 둔화, 투자 저하 등이 스페인 성장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 필요
- 공공행정에서 부패 방지를 강화하면, 공공투자의 질이 높아지고 재정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 교육 강화, 청년 노동 시장 참여 촉진, 기업가 정신 향상, 주택 접근성 강화 등은 스페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층 빈곤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
- 25세 미만 실업률은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스페인 청년 노동시장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상황
- 34세 미만 인구의 50% 이상이 부모와 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입 부족과 고용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²⁵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subject-to-tax-rule-pillar-two_9afd6856-en

²⁶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spain-2023_5b50cc51-en

‘경인 아라뱃길’과

ESG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 행주대교 남단(강서구 개화동) 인근에서 시작해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서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물길이다. 길이가 19km에 너비가 80m, 수심 6.3m로 ‘아라천’이라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운하이다.

이 뱃길은 굴포천이라는 하천의 방수로 기능을 하는 하천이다. 굴포천의 중하류 지역은 표고 5.5m밖에 안 되는 저지대로서 잦은 홍수와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곳이었다. 1987년 7월에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당시 42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굴포천 치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굴포천에 방수로(9.7km)와 하천개수(8.5km)를 위해 총 2,42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방안이 제기되었다. 기왕에 40m짜리 방수로를 지을 거면 80m 정도로 넓혀 운하를 만든다면 홍수방지에도 좋고 서울-인천 간 물류로 인한 교통 혼잡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모래·철강·시멘트 등의 화물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지금도 그렇지 만...)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하를 이용한 물류가 교통체증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필자는 예산실의 건설교통예산과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1991년 8월 경인운하 건설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열렸다. 경인운하 건설의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은 시간을 갖고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당시에는 예타와 같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의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굴포천 치수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착공을 추진하되 경인운하 사업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1992년 12월 방수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방수로 폭도 40m에서 80m로 확장하여 미래 경인운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때마침 1994년 8월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를 비롯한 8개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다. 이 회사가 2001년 8월에 경인운하를 위한 방수로 공사를 착공한다. 그러나 2003년 감사원이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졌다

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7월에 공식적으로 사업을 중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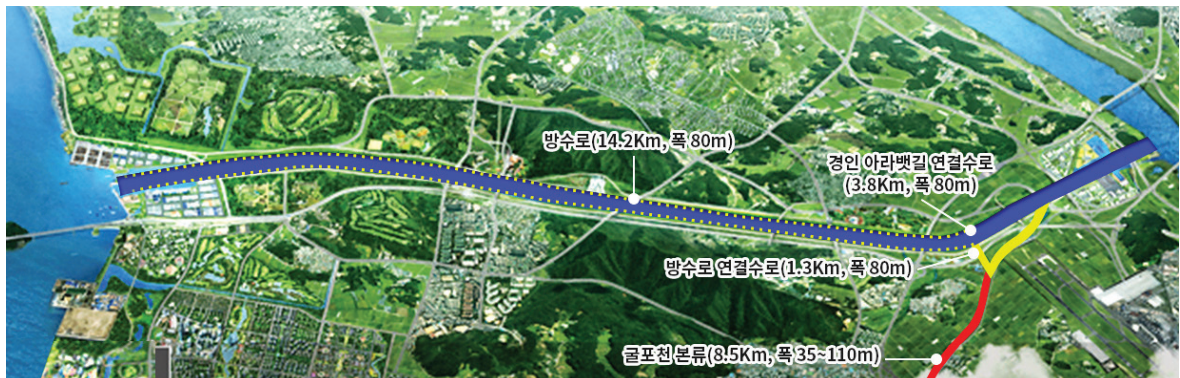
이후 경인운하 사업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다. 정부는 2006년에 경인운하 사업의 정밀 분석을 위해 운하 강국인 네덜란드의 운하업체(DHV)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정부 방침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근거로 경인운하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우선 사업명칭을 ‘경인 아라뱃길’로 변경하고,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K-WATER)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드디어 2012년 12월 25일 우리나라에도 운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ESG 관점에서 본 ‘경인 아라뱃길’

이 사업이 확정 진행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ESG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였다.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경제성이나 재무적 판단 보다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다보면 어떻게 될까.

〈그림〉 ‘경인 아라뱃길’ 지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https://www.kwater.or.kr/giwaterway/ara/sub02_01_02.do)



환경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당초 계획상의 물동량을 달성한다면 교통체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명분이 뚜렷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계획과 달리 저조한 물동량과 적은 이용자들로 인해 ‘경인 아라뱃길’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계획 대비 10%도 안 되는 물동량에 유람선 이용객도 계획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영회사는 적자의 수렁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악취 등 환경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변 수도권매립지가 원인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이라는 상습 침수 지역의 홍수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설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인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조 6,000억원이 넘는 돈은 너무 큰 것이었다. 2조짜리 자전거도로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라면 당초 계획대로 2,500억원 수준이면 족했을 것이다.



지배구조면에서

지배구조면에서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이다. 시공만 민간이 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외국 전문업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운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유럽식 운하에 대한 환상 등으로 이 사업을 보기보다는 ESG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아라뱃길의 활용방안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한 도시의 부동산 규제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맘대로 아무 건물을 짓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보다 세분화하여 엄격히 토지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주거용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으로 세분된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된다. 상업용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엄연히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인의 자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엄격한 법률적 규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과 같은 토지 사용의 제한을 처음 검토하기 시작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 형태는 전통적인 가내공업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가내공업의 작업 환경은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 그러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러 사람이 단일 지역에 몰려 대규모 생산 활동에 참여하자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 다양한 도시 오염 요인이 불거졌다. 특히 엄청난 대기오염이 유발되었고, 결국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여 수만명의 런던 시민이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1800년대 중반 영국의 위정자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명확히 구분지어 따로 위치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른다.

기업주 내지 공장주 역시 거주공간과 산업공간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지역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토지환경, 배관시설, 전기시설 등이 필요했다. 만약 비슷한 환경이 필요한 기업들이 별도의 공간에 모여 있을 경우, 개별 기업 혼자 구축하기 어려운 여러 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 속에서 탄생했다.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은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해 폐수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는 토지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대단위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도 유용하다는 점에서 기업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로 인해 토지 이용의 명확한 구분이 시도된 초기 사례들이 영국 부호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바스(Bath), 브라이튼(Brighton), 에든버러(Edinburgh) 같은 개발지역은 당시 영국의 귀족 내지 부유층의 지원으로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계된 최초의 기획도시였다. 이들 지역은 런던 시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토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초기부터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도시들의 성과들이 확인되면서 19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도시들은 구획별로 용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1896년 조성된 트래퍼드 공업단지(Traford Park Estate)가 바로 그것이다. 민간에 의해 맨체스터 지방에 조성된 이 단지는 1,200에이커(약 4.8km²) 규모의 임해단지로서 주로 전기·기계·건축·제분·목재 업종이 입주하여 영국의 제조 경쟁력을 이끌었다.

이러한 영국의 시도는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전달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시장과 도시사와 같은 지자체장들이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이 향후 어떠한 목적 아래 토지를 이용할 계획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에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도시 환

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를 사전에 수립된 계획하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흔히 벼락부자가 생기기도 한다. 절대 농지로 사용되던 곳이 상업지구로 변경되거나 홀로 떨어져 있던 외진 공간에 도로가 들어설 경우에도 엄청난 지가 상승을 가져온다. 벼락부자까진 아니지만 가장 커다란 지가 상승효과를 가져다주는 변화 중 하나가 지하철 건립과 같은 역세권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선 역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도시 내 각 지역이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용도의 지역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거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매일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 할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상업지역까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주로 보도로 걸어서 이동했다. 이 때문에 초기 도시에는 보행권



이란 개념이 주요했고, 보행권을 경계로 땅값에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행권은 지역 인근의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까지 걸어서 접근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보행권이 어느 정도 거리 내에 위치해야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치된 개념은 없다. 그것은 해당 편의시설의 이용 주체가 누군가인지에 따라서 보행권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세권이라고 해서 학교가 인접한 거주지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걸음걸이가 느리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거나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야 교세권을 주장하기가 쉽다. 같은 논리상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 내지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보행권이 확보된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행권은 노인 대상 시설물은 400m 이내, 성인 대상 시설물은 800m 이내에 위치했을 때 실제 매매시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보행권은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역세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역세권에서 역은 주로 지하철역을 의미한다. 흔히 지하철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때 역세권이 확보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역세권이 확보된 지역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역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가능할까? 역세권 역시 학문적으로 규격화된 통일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도보로 10분 안에 역에 도달 가능할 때 역세권이 확보된 지역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성인 걸음걸이로 10분 안에 도착 가능한 거리는 800m 정도이다.

특히 역세권을 확보한 지역의 지가 상승효과는 일종의 복권 당첨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시설 투자들은 거주민들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지 내 조경 내지 놀이터를 정비한다든가, 외관 등을 교체한다든가, 외부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행위들 모두 거주자들의 각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하철은 다르다. 지하철은 국가 단위의 SOC 사업으로 지하철 건립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출된다. 다시 말해 초기 건립 자금은 전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지하철이 완공된 후 역세권 프리미엄은 온전히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거주민들이 독차지한다. 전 국민의 세금이 역 근처 주민들의 아파트값 상승에 활용된 격이다.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땅의 용도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2D 형태의 2차원적인 접근만이 아니다. 3차원적으로는

해당 부지에 어느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건폐율이란 쉽게 말해, 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물의 정중앙 위에서 조명을 비출 때 생기는 그림자의 면적을 건물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면적을 부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건폐율이다. 예를 들어 100평 부지에 건물 그림자의 면적이 50평이면 건폐율은 50%인 것이다. 용적률의 개념은 건물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었을 때 필요하다. 모든 건물이 단층 건물은 아니다. 2층, 3층, 수십 층 건물들도 즐비하다. 그런데 건폐율 개념으로는 이들 건물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그림자 면적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건폐율은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이 연면적을 부지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용적률이 된다. 예를 들어 100평 부지에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이 들어섰다고 가정해 보자. 1층 바닥면적은 50평, 2층 바닥면적은 30평이라 할 때, 총 바닥면적인 연면적은 80평이며, 용적률은 80%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토 이용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해 토지 이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토지의 과도한 활용을 막기 위함이다. 토지 역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폐율 100%의 건물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인근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토지 면적을 100% 활용해 건물

을 올릴 경우, 인접 건물들이 모두 맞붙어 있게 되고, 이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확보 문제와 일조량, 통풍 감소 등으로 인한 위생 상태 저하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적 토지 사용의 목적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정 건폐율을 구분하여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토지 사용의 대표적인 규제 사항인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경우가 많다. 지자체장이 관련 규제만 완화해도 얼마든지 토지를 추가로 활용하여 더 높은 금전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토지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비해 사용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빌딩을 올릴 수 있는 토지로 분류되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높은 임대소득을 거두게 되거나, 도로나 지하철이 인근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가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도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규제들이 자연스럽게 부동산 소유자들 간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숫자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저자인 폴 굿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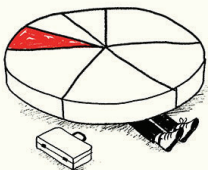
옮긴이 신솔원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발간일 2023년 9월 18일

데이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숫자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Something Doesn't Add Up

한국경제신문

저자 폴 굿윈은 비즈니스 예측과 의사결정 분석 분야의 전문가이자 통계학자다.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1년 동안 양적 연구를, 16년 동안 운용과학을, 13년 동안 경영과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배스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 책은 숫자와 통계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숫자를 향한 분별없는 믿음과 수용이 어떻게 우리를 나쁜 결정으로 이끄는지 밝힌다. 숫자와 통계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별생각 없이 눈으로 훑던 수많은 숫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통계적 사고'를 소개한다. 저자는 많은 수식 없이 숫자와 통계를 재미있게 설명한다. 통계적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적절하고 친숙한 소재들을 예시로 드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숫자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있는 독자에게도 쉽게 다가간다. 통계적 사고라는 무기를 활용해 한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독자는 더 이상 숫자에 지배당하지 않고 숫자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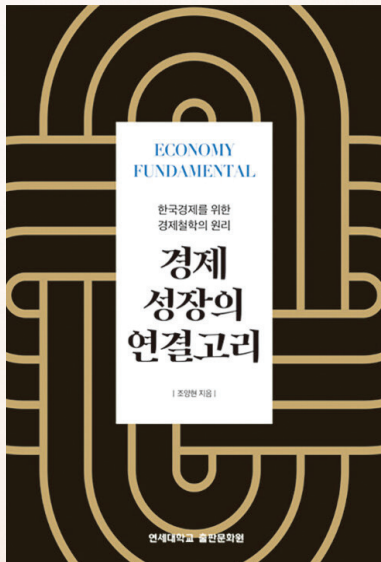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

지은이 조양현

출판사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발간일 2023년 9월 8일



저자 조양현은 국책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과 유럽 지역의 경제연구 등을 담당했고,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15년 이상 참가하여 국제무역과 금
융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대학교에서는 15년 전부터 유럽 지역과
국제무역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경·제·를·위·한 경·제·철·학·의·원·리

한국경제가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보여줄 것인
가? 아니면, 선진경제권의 진입 경계선에서 좌초할 것인가? 글로벌 경
제여건이 녹녹치 않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방향과 대책
이 정립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경제 고전에서 찾고자 지
난 300년간 경제이론의 영역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경제
대가들의 대표저작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지난 300년간 경제 대가들
의 대표적인 경제서적(원저)을 완독한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재분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및 국제회의 참가 경험
과 한국유럽학회의 학술지(유럽연구) 기고 내용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
라에서 출간된 경제서적과는 다른 실증분석 관점에서 다른 차별적 특
성을 함유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건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살펴보자.



관계기관(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기획재정부, 10.10.)

- 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나, 사태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향후 사태 전개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기획재정부 10.16.)

-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인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증가, 소매 판매는 감소
- 2023년 9월 중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등으로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환율 상승
-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속에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

유류세 탄력세를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 10.19.)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

통화정책방향(2023.10.19.) 발표 (한국은행, 10.23.)

- (기준금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한국은행, 10.26.)

- (실질 GDP)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
- (실질 GDI) 2.5%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6%)을 상회



JANUARY

01

재정

- 2024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2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2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MARCH

03

재정

-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APRIL

04

재정

- 2022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MAY

05

재정

- 2024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2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JUNE

06

재정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재정

-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4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
(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OCTOBER

10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NOVEMBER

11

경제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구독자 설문조사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매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매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매독자 QUIZ

문
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로 지난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된 「○○○○ ○○을
위한 ○○○○·○○○○ ○○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재정투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의하는 등, 기후
대응에 대한 재정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 이 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답

□□□□□ □□□□□ 을 위한
□□□□□ . □□□□□ □□□□□ 법

독자편지

010-****-090 

재정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정 용어를
해결해 주는 월간 <나라재정>이 교과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이 요약정리되어 있어
가뭇의 단비처럼 저의 마른 목을 축여준답니다.

매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3. 11. 27. ~ 2023. 12. 10.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097
010-****-791
010-****-550
010-****-145
010-****-793

010-****-652
010-****-090
010-****-587
010-****-873
010-****-849

재정정보화를 통해 국가 재정 업무 발전에 기여합니다



데이터 기반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You will hear the news of EXPO victory report.

11월 28일

엑스포 유치는 우리의 숙명!

이제 마지막 승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대한민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칠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산 앞바다에

감격의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2023.4.2~7 ○ BIE 평가단 방문
(인프라 및 유치열기 등 평가)

2023.6.20 ○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2023.10.9 ○ 국제 심포지엄(파리)

2023.11.28 ○ **개최국 선정 투표**
(182개 회원국 비밀투표)

11월 28일은 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함께 응원해주시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Winter Youth Olympic Games Gangwon 2024

01.19-02.01 • @GANGWON2024     



**GROW
TOGETHER
SHINE
FOREVER**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23.11.1.(수) ~ 12.15.(금)

가을철 산불발생의
약 52% 입산자 실화

산불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홈페이지가기

지원대상

이동 / 청소년 1,578억

노인 954억

장애인 469억

여성 / 다문화 343억

약가정 1,852억

지역사회 2,035억

해외 / 북한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57억

교육 / 자립 915억

주거 / 환경 735억

보건 / 의료 528억

심리 / 정신 285억

사회적 돌봄 강화 659억

소통 / 참여 확대 210억

문화복지 서비스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랑의열매 무료 광고입니다.